고삐 죄는 日

선박·상품·사람 모두 차단

아소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12일 참의원 예산위에 출석,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안을 설명하고있다. /AP연합뉴스

정박 선박 24척에 퇴거명령 내릴 듯
국제사회 동향 봐가며 추가제재 준비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저녁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초고강도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선박입항금지법과 외환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취한 제재조치에는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또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의에서 제재조치를 정식 결정, 발동할 예정이다.

일본이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의 모든 선박과 상품, 관계자 등의 일본 접근이 봉쇄됐다.

북한은 특히 송이와 바지락, 성게, 대게 등 농수산물과 무연탄 등을 일본에 수출해왔으나 이번 제재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일본에 144억엔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현재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영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돗토리현의 사카이항과 홋카이도의 오타루항 등 일본 항구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은 모두 24척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항의로 운송회사 등이 하역을 거부하고 있어 하역을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추가 제재조치의 조건으로 핵실험 실시의 확인을 제시하는 등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핵실험 규모가 작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외 여론을 등에 업고 신속히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이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 구체적인 확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판단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발 빼는 美

항공기 이착륙 등은 허용

'북 화물 검색' → '필요한 경우'로 국한
추가 핵실험·핵기술 확산 방지에 주력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완화된 대북 제재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를 추진중인 가운데 미국이 11일 당초 결의안을 수정,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시켰다.

AP통신이 입수한 이 수정 결의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 무기 계획 지원자에 대한 여행금지 조항이 추가됐으나 금융제재, 화물검사 조항의 어조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요구한 ▲북한 선박 입항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은 강경한 제재결의안에 난색을 표시해온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징계하기 위해 13일 중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말했다.

수정안은 지난 9일 안보리에 제출됐던 결의안 초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안보리의 요구를 "악의적으로 무시한데"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정안은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 주장을) 우려하는 모든 국가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안정의 유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수정안은 북한의 현 상황,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국제 평화 · 안정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초안과 마찬가지로 국제평화의 위협과 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교관계 단절, 해상봉쇄는 물론 군사행동까지 규정한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 직후나 11월 미국 중간 선거 후 유력

■ 北, 추가실험 한다면 언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연이은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경고함으로써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만일 북한이 정말 제2, 제3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까. 추가 실험을 감행한다면 그 시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이 담긴 결의안 채택 직후를 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선 나오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대한 비난에서 출발한 만큼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행동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보리 결의안이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1~2주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북한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총련계 동포 김명철 박사도 12일 KBS라디오에 출연, "한반도 운명이 1주일 이내에 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당분간 국제사회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추가 핵실험은 하더라도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안 할 것"이라면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고 미국의 악의적 무시가 계속되고 압박이 계속되면 그때나 추가 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추가실험을 한다면 그 규모는 1차 실험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핵실험으로서는 폭발 규모가 작다',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아 핵실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등 1차 실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완전 잠재울 정도로 2차 실험이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같은 측면에서 북한이 2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역시 실험 전에 실험사실을 중국 등에게 사전 통보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한국 시간) 반기문 UN 차기 사무총장 내정자가 코피 아난 현 UN 사무총장의 사무실을 방문,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실험 장소 상평리 아닌 길주군 북서쪽 30km 추정"
한나라 김희정 의원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12일 북한의 핵실험 장소와 관련, "정부가 공식 발표한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리가 아닐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입수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진앙지는 함북 길주군 북북서쪽 30㎞ 지역인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미국.일본과 우리나라 핵실험 장소 공식 추정지점 간의 거리는 40~52㎞에 달하는데 이는 지진 진원의 오차범위 5~10㎞를 벗어난 것"이라며 "핵실험 장소는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